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위원장 송종순 010-9102-7165, jssong@chosun.ac.kr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한국원자력학회 성명서에 대한 산업부 정책브리핑 자료 검토 의견

- (재반론 필요성) 12월 18일(월)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관련한 학회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 산업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반론성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일부 불합리한 설명과 구체성이 없는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재반론함.
- (사회적 비용의 산정과 공정한 적용)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산업부는 사고위험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다른 발전원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다음 두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 (적정수준 사회적 비용 기포함) 원자력 발전 원가에는 법정 사고보상보험료와 지역지원비, 연구개발비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보상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원자력 발전 원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타발전원의 사회적 비용 미고려) 충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면 모든 발전원에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함.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미세먼지 배출, 재생에너지 발전원 부지 확보와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에 대한 사회적비용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정하게 비교해야 할 것임.

- (신규원전 미건설시 원전 설비 공급망 붕괴) 산업부는 신규원전없이도 가동원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 설비 공급망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냉각재 펌프, 원자로 개폐 장비 등의 원전 설비는 가동원전이 아니고 신규원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전 설비 공급망 유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타당하지 않음.
  
- (계속운전 금지 기준에 대한 판단 오류) 산업부는 탈핵국가에서 노후원전 계속 운전여부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스위스와 벨기에에서 4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이 각각 3기와 2기임. 스위스는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계속운전을 한다는 기조이며 벨기에는 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계속운전을 하고 있음.